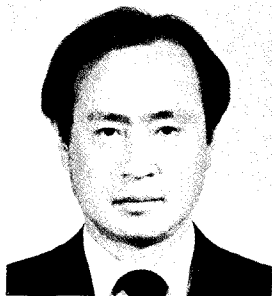


■ 편집위원 칼럼

89

91

농 축 산 물 수 입 개 방 예 시 계 획 을 보 며



유철호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지난 4월 8일 89-91년간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 예시계획을 발표했고 최근 한미간의 농산물 분야 시장개방문제 협상에서 대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안대로 타결을 보게 되었다.

지난번 정부가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세우면서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품목의 선정이나 피해보상대책, 지원방법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였다고 보여진다.

품목의 선정에 있어서 고려된 사항을 보면 국내 생산이 미미하여 농가소득에 영향이 적은 품목, 배합사료 원료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산원자재로서 수입자유화에 의하여 농가경영비 절감에 필요한 품목, 경쟁이 가능하거나 교역이 부적합하여 수입이 어려운 품목 등등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수입자유화 조치와 관련, 농어민의 피해 및 지원방법으로는 첫째, 직접피해가 발생할 때는 이를 보상하고 둘째, 자유화대상 품목생산 농어민이 작목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며 셋째, 수출전망이 있는 품목을 집중지원·육성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자금의 지원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3개년간 개방될 축산물중 육류는 대부분 국내 생산량이 미미하고 국내 육류 소비자들에게 생소하기까지 보이는 품목들이어서 발작목에 비해 이번 예시계획에 따른 피해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자유화 예시품목중 특히 가금육으로는 오리고기, 가공품으로는 칠면조 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닭고기 시장개방은 유보상태에 있다. 앞으로 농축수산물의 시장개방압력은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 축산업계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정부와 생산자 단체 등에 의한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확고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하겠다.

특히 가격안정은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정적인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경영합리화에 의한 생

산비 절감을 기하기 위해 가격안정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산물 생산은 산지가격의 심한 변동으로 생산조정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여 왔다. 지속적으로 증가된 축산물 수요에 대응하여 양적인 생산량과 생산액은 늘어왔으나 이 과정에서 축종별 또는 세부생산품목별로 보면 심한 가격변동이 지속된 결과 경영합리화와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에 의한 소득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어 왔다.

특히 근년에 와서 외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개방화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산지가격의 불안정과 생산기반의 와해 또는 약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가격안정을 중심으로한 구체적인 대책수립의 지연으로 양축가들의 집단행동과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수입개방에 의한 가격의 하락은 필연적으로 피해보상문제가 빈번하게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가격안정정책은 대체로 극심한 수급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가격의 변동시에만 극히 제한적인 물량의 수매비축사업으로 일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양축가들에게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의욕, 소득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거의 주기적으로 큰 폭으로 변동되어 온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 능력이 제고되어야 하며, 재정자금의 지원하에 가격안정대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 축종별로 현실적인 생산비의 조사, 정부 지지가격수준과 수매비축물량의 산정과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추정 등 사업운영에 따른 포괄적인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기초조사연구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축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각 유통단계 및 축종별로 고질적인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전축종에 공통되는 점은 문전판매의 성행, 산지시장에서의 전근대적인 거래방식의 존속과 중간상인들에 의한 거래물량의 증대와 이에 따른 공정거래 가격 형성이 의문시되어

왔고 도축과 운송, 소매단계에서 비위생적인 처리문제가 끈질기게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감독이 미흡하였다.

특히 육우유통과정에서 강제급수에 의한 증체로 부당이득 취득사례가 빈발하여 왔으며 비위생적인 도계 및 유통상의 모든 부조리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유통구조의 개선방향은 유통시설의 규모화와 근대화에 의한 공정거래가격 형성 유도,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한 감독강화, 생산자들에게 고품질 생산출하에 따른 높은 소득보장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품질의 등급 및 규격화사업 정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산지가축시장, 도축장 등 유통시설은 점차 통합에 의한 규모의 대형화 및 근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위생적인 도축처리를 검사, 감독, 단속과 품질의 등급 및 규격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청된다.

이제까지 지적된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의 정착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축가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임상승에 대비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 투자증대 그리고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품질개선을 위한 종축개량과 이에 따른 사육기술체계의 수립과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연구행정체제는 정비되어야 하며, 민간단체 및 학계와의 기술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의 강화와 대양축농가 기술지도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난번 수입개방 예시계획 및 보완, 지원대책과 함께 우리나라 농축수산분야의 구조적인개선 등을 중심으로한 다각적인 대책으로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의 실천계획 또한 4월 28일에 발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축산분야에서는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선책이 나왔으면 한다. **한민**